

#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9. 30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박덕흠 · 류성걸  
구자근 · 김선교 · 권명호  
김석기 · 추경호 · 이 용  
한무경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 없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,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·운영하고,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

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).

##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·운영하고,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제5항에 따른 문화재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~ ④ (생    략) <u>&lt;신    설&gt;</u>	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</u> <u>의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</u> <u>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</u> <u>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</u> <u>문화재전담관을 지정·운영하</u> <u>고,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</u> <u>한다.</u> ⑥ <u>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</u> <u>의 문화재 업무를 수행할 전담</u> <u>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<u>한다.</u> ⑦ <u>제5항에 따른 문화재전담관</u> <u>과 전문인력의 지정·운영 등</u> <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